
정책참고자료

2019-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4
	- 행안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우수기관서 반부패·청렴 '한 수' 배운다	8
	- '청렴 멘토링(mentoring)'으로 반부패 역량 진단, 개선방안 마련해 청렴실천 계획 수립 -	
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11
	-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 지원 -	
4 교육부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16
	- 3. 4.(월)~22.(금) 집중신청기간, 약 7,200억원, 70만여 명 수혜 예상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뜻한 인공지능(AI)'을 향한 발걸음,	23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정보화 사업' 본격 추진 -	
6 문화체육관광부		
	지속 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모색	26
	- 3. 9. 평창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작물도 스마트하게 기른다	28
	- 11개 과제 선정, 다양한 노지작물에 농작업 편의성 향상 -	
8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 생태정보를 한번에..에코뱅크 운영	31
	- 생물·생태계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관리·서비스 기반 마련 -	

9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_____ 35

10 여성가족부

한부모 정책과 사업,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합니다! _____ 41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3월6일(수) ~ 3월20일(수) 공모 -

11 국토교통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_____ 45
- 음주음전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

12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마을 운영진이 이끈다 _____ 57
- 해수부.어촌어항공단, 1차 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 행안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8일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 2017년 5월 30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 6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 효과가 큰 5대 체험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하고, 2021년까지 건립중인 국민안전체험관 7개소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전국의 156개 국민안전체험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 또한, 전국의 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15개 시·군·구),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 둘째,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하여(14개 → 40개) 민간영역에서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추가로 등록(2,405명 → 4,000명)하여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 또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하고,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 아울러,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통해 학습이 필요한 안전 분야와 내용을 도출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 각종 재난·안전사고 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 셋째, 안전교육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 정책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정부 안전교육 추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각 개별법 및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알기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여 이용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매년 소관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행안부에서는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익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1**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7개소)**

연번	지역	구분	위치	규모(부지면적/연면적)
1	서울	대형	도봉구 방학동 708	10,883㎡ / 8,400㎡ (지상 5층, 지하 2층)
2	인천	특성화 (항공안전)	서구 가정동 489-2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10,421㎡ / 7,113㎡ (지상 4층, 지하 1층)
3	광주	대형	북구 오치동 5-10	13,650㎡ / 6,994㎡ (지상 3층, 지하 1층)
4	경기	대형	오산시 내삼미동 242-3	16,500㎡ / 7,157㎡ (지상 3층, 지하 1층)
5	충북	중형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	26,427㎡ / 2,900㎡ (지상 2층)
6	경남	중형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0	71,824㎡ / 2,978㎡ (지상 1층)
7	제주	중형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45	46,789㎡ / 5,375㎡ (지상 3층, 지하 1층)

청렴도 우수기관서 반부패·청렴 ‘한 수’ 배운다

- ‘청렴 멘토링(mentoring)’ 으로 반부패 역량 진단,
개선방안 마련해 청렴실천 계획 수립 -

- 청렴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청렴’ 멘토링(mentoring)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시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8일부터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 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청렴성 향상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청렴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유사한 기관들이 그룹을 구성한 후, 청렴성이 높은 선도기관이 국민권익위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룹 컨설팅 도입 이후, 국민권익위와 청렴도 우수기관 간의 협업과 함께 컨설팅 대상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즉 ‘멘티(mentee)’는 지역별·기관

유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mentor)'로 지정해 컨설팅을 신청한다.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우수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하우 등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과 토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토착비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패취약분야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 청렴 컨설팅 내용 및 진행절차 】

- 구성원 대상 청렴인식수준 및 청렴도 저조 원인분석
- 기관 반부패 역량진단(설문조사결과, 기관 반부패·청렴 업무계획,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 등)
- 권익위, 멘토, 멘티기관 간 분석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수립
 - ▶ 컨설팅 기관 선정 →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 → 1차·2차 컨설팅 회의 → 컨설팅보고서 작성 → 컨설팅 성과공유 및 평가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는 82개 기관으로 부터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10개 멘토기관, 24개 멘티기관을 선정하고, 10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실행 가능한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21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됐고, 특히 4개 기관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이 향상됐다.”라며, “멘토·멘티 간 청렴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 성공사례를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청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9년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 10개 그룹 : ▪ 10개 멘토 및 ▶ 24개 멘티기관

수도권 (2그룹)	충청권 (1그룹)	영남권 (3그룹)	호남권 (2그룹)	유형별 (2그룹)	
▪ 서울신용보증재단	▪ 통계청	▪ 한국수력원자력	▪ 광양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산업은행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경주시 ▶ 영천시 ▶ 문경시	▶ 나주시 ▶ 목포시	▶ 강원랜드 ▶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체국금융개발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영광군	▪ 한국전력기술
▶ 금융감독원 ▶ 중소기업은행		▶ 울산도시공사	▶ 봉화군 ▶ 울릉군	▶ 장흥군 ▶ 완도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마사회
		▶ 경남개발공사 ▶ 경북개발공사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 지원 -

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 공동사업 :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구분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조합원 요건 (18→19)		소상공인 5인 및 소상공인 50%(60→50) 이상	조합원 20인(15→20) 및 소상공인 50%(80→50) 이상	조합원 15인(10→15) 및 소상공인 50%(80→50) 이상
지 원 한 도	공동 일반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8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사업, 80% 이내 · 공동장비, 70% 이내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사업, 80% 이내 · 공동장비, 70% 이내
	공동 장비	최대 1억원 한도 국고보조금 70% 이내		

둘째,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 (2018년)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2019년) 기존 6곳 + 2곳 추가 선정

구분	주요 내용
교육	협동조합 설립교육, 협동조합 경영교육, 세무·법률 전문교육, 현장체험교육 등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지원, 세무·법률 전문상담, 마케팅·경영·갈등해결 컨설팅 등
네트워킹	지역별 협동조합간 사업협력 활성화, 협동조합 간의 화합·교류회 운영
점검/관리	사업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진도점검 및 행정지원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용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 원 → 10억 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 2019년 100억원 별도 편성

** (온라인 판로) 소셜커머스, V-커머스, TV 광고 등,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지역판매전 등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유통 협동조합) 대기업·소비자조합의 시장잠식에 대응하여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성공함(르클레르, 레베, 코나드, 하계바우 등) ■ 공동구매를 기반으로 동일 브랜드로 체인화해 자국의 유통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여, 고용·매출에 절대 비중 차지
	※ 세부내용 : '참고2' 참조

“동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 적

-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 사업을 지원하여 협업 촉진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임

□ 사업내용

- (공동사업) 소상공인 간의 참신한 협업모델 사업화를 위해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등을 지원

- (일반형 조합) 분야별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및 조합원(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임

* 대상 : 소상공인 5인 이상이며,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율 50%이상인 협동조합

* 지원 : 일반 1억원 한도 80%이내, 장비 1억원 한도 70%이내

- (선도형 조합) 안정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선도형으로 육성(최대 5억원)

* 대상 : 조합원이 20인 이상, 소상공인 비율 50%이상인 협동조합

* 지원 : 일반/장비 구분 없이 5억 원 한도, 일반 80% 이내, 장비 70% 이내

- (체인형 조합) 프랜차이즈시스템 도입·개선, 전국 단위 규모화에 적합한 협동조합을 체인형 조합으로 육성(최대 5억 원)

* 대상 : 조합원이 15인 이상, 소상공인비율 50%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인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사 이상

* 지원 : 일반/장비 구분 없이 5억 원 한도, 일반 80% 이내, 장비 70% 이내

유형	신청자격	지원한도/비율		전체 한도
		공동일반(80%) (브랜드, 마케팅, 개발 등)	공동장비(70%)	
일반형	소상공인 5인 및 소상공인 50% 이상	1억원	1억원	2억원
선도형	조합원 20인 및 소상공인 50% 이상	5억원		5억원
체인형	(조합) 조합원 15인 및 소상공인 50% 이상 또는 (연합회) 조합 3개 이상	5억원		5억원

- **(판로지원)** 소셜커머스, 토막 광고, 수출 교육, 지역 판매전 참가 등 공동판로를 지원하여 협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함

* (온라인) 소셜커머스, 토막 광고, V-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채널 확대

* (오프라인) 박람회, 전문전시회, 지역 판매전 등의 참가를 통해 홍보 및 매출 증대

- **(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전국 8개 내외)를 선정하여 조합 운영 비결, 갈등 관리, 조합 설립 인큐베이팅 등의 교육·컨설팅 지원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2곳 추가 선정

□ 2019년 추진일정

- **(공동사업)**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 지원 규모 : 일반형 250개 내외, 선도형 25개 내외, 체인형 25개 내외

* 사업 공고(2.28), 신청(3월~5월, 월 1회씩 총 3회), 평가.선정(3월~6월), 사업(~12월)

- **(판로지원)** 온라인(100개 내외), 오프라인(200개 내외) 등

* 사업 공고(3월), 신청.접수(4월~), 평가.선정(5월말), 사업(~12월)

- **(협업아카데미)** 전국 8개 내외 선정·운영

* 사업 공고(3월), 신청.접수(3월), 평가.선정(4월), 운영(5월~12월)

- **(정책자금)**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조합별 한도) 최대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포함, 예산 소진시까지)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3. 4.(월)~22.(금) 집중신청기간, 약 7,200억원, 70만여 명 수혜 예상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붙임1] 참조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

급여항목	대상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8년	'19년	
부교재비	초	131,208원	66,000원	132,000원 (100% ↑)	연1회
	중·고	208,860원	105,000원	209,000원 (99% ↑)	
학용품비	초	70,494원	50,000원	71,000원 (42% ↑)	연1회 (기존 연2회 분할지급)
	중·고	80,826원	57,000원	81,000원 (42% ↑)	
교과서비	고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연1회
수업료					분기별

* 최저교육비 :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급여의 최저 보장수준 책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3년마다 계측)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사업별 · 학교급별 지원 내용 >

기준	교육급여		교육비	
초	부교재비 13.2만원	학용품비 7.1만원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중	부교재비 20.9만원	학용품비 8.1만원		
고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포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9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1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21.7만원) - 고교 교과서대(연 8.4만원) - 학용품비 (초) 연 7.1만원 (중·고) 연 8.1만원 - 부교재비 (초) 연 13.2만원 (중·고) 연 20.9만원 	<p>시·도교육청별로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 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연 63만원)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교과서대 및 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붙임 2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포털(www.bokjiro.go.kr)

-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제공 담당기관(복지로 사이트 참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9. 작년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9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10.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①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접속
- ② 메인 화면에서 교육비 신청대상여부조회 배너 클릭
- ③ 해당 학생 소속 지역 선택
- ④ 학부모의 정보 입력 및 실명 인증 확인 등
- ⑤ 해당 학생의 생장,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⑥ 결과 조회

*신청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함

Q11.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 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인공지능(AI)’ 을 향한 발걸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정보화 사업’ 본격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9년 총 40억원)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국내 뉴스 분석, 현장 수요자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학계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분야별로 다양한 후보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그 중 시급성·과급효과·기술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추진할 신규 4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 4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음성 안내 방송(예: 출발/도착, 지연, 재난)의 실시간 문자/수어 애니메이션 전환 서비스**와,
 - 조기발견 및 인지훈련이 필요한 **발달장애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령화로 인한 그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위하여 말벗, 일상 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돌봄 로봇과,
 - 독거 노인의 생활 관리를 위하여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맞춤형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의 초기 투자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정보 서비스 시장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동 사업 성과의 보다 원활한 확산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 수요자(예: 농아인협회, 발달장애아 부모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동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개발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모기간은 3월 7일(목)부터 4월 8일(월)까지이다.
 -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3월 12일(화)에 개최된다. (14: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따뜻한 AI 세상,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제(4개)

<p>불이야! 듣지 못해도 알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 안내 음성 문자·영상 변환</p>	<p>집에서 놀면서 배워요, 엄마 눈물 그만! 발달장애아 AI 가정교사</p>
<p>치매 어르신, 로봇이 돌봄도 말벗도 OK! 치매 환자 돌봄 로봇</p>	<p>홀로 계신 부모님 걱정 더 이상 애태우지 마세요! 재가 독거노인 일상생활 지원</p>

지속 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모색

- 3. 9. 평창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3월 9일(토) 오후 2시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2층)에서 '지속 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패럴림픽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을 개최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현주 연구원의 사회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패트릭 스톨프만 전략기획부장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김정남 기획팀장이 각각 '패럴림픽의 가치와 유산 창출 우수 사례'와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과와 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제별로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19년 30개소),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8년 577명 → '19년 800명),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 도입,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확대('18년 480개소 → '19년 720개소), ▲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실시(3개소) 등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 창출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평창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계획(안)

□ 포럼 개요

- (목 적) 동계패럴림픽 개최 1주년을 맞이하여 패럴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패럴림픽 유산 창출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
- (포럼명) 〈Beyond Pyeongchang : 패럴림픽의 미래를 말하다〉
〈Beyond PyeongChang : Design the future of Paralympics〉
- (일시/장소) '19. 3. 9.(토) 14:00-15:30 / 알펜시아 2층 컨벤션센터
* 평창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11:00~13:30)와 연계하여 개최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제) 지속가능한 패럴림픽 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 (참 석) 장애인체육 선수 및 관계자, 일반인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 회(발표자 및 진행방법 등 소개) * 사회 : 조현주(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14:05~14:40('35)	○ 세션1 : 패럴림픽의 가치와 IPC의 유산정책 및 유산 창출 우수사례 * 발표자 : 패트릭 스톨프만(국제패럴림픽위원회 전략기술부장)	
14:40~14:55('15)	○ 자유토론	
14:55~15:15('20)	○ 세션2 :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 발표자 : 김정남(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획팀장)	
15:15~15:30('15)	○ 자유토론	
15:30	○ 폐 회	

노지작물도 스마트하게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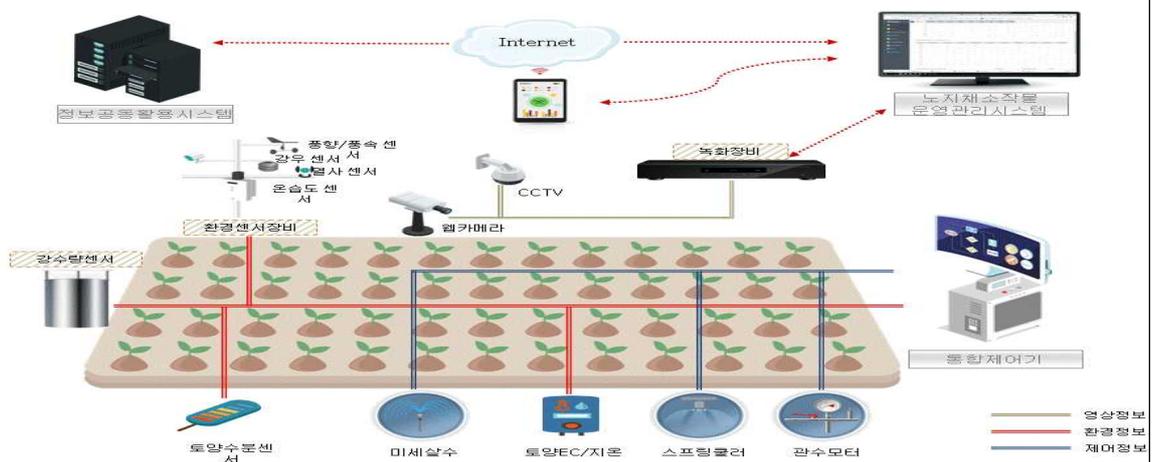
- 11개 과제 선정, 다양한 노지작물에 농작업 편의성 향상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반 노지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과제(10개 시·군)를 선정하였다.

-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은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지채소, 과수 등 노지작물에 센서, 자동 관수·관비 장비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시설원예와 축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하기 위해 '18년 모델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하였고, '19년에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18년: 11억원 → '19: 60)

< '18년 노지 스마트팜 추진 사례 >

- 대상 지자체 : 강원 태백, 전북 고창, 전남 해남·무안, 경북 안동
- 사업내용 : ICT장비(센서, 제어장비, CCTV 등)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원거리에서 농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게되어 농작업 편의성 향상



□ 농식품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13개 과제(12개 시·군)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를 거쳐 11개 과제(10개 시·군)를 선정하였다.

* (강원)태백, (충북)제천·청주, (전북)부안, (전남)신안·영광·곡성·장흥·무안, (제주)제주

○ 특히, 올해는 작물대상을 기존 노지채소에서 노지 작물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채소(배추, 양파, 대파)뿐만 아니라, 과수(사과, 블루베리, 감귤), 특작(삼백초) 등 다양한 품목이 선정되었다.

○ 또한, 지자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사업 기획·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이 가능해지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노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지작물에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기반이 마련되면, 물·비료·병해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불필요한 농작업이나, 농자재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격정보, 기상정보 등과 연계하면 노지작물의 수급조절이나 재배시기 등 의사결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농식품부와, 농정원,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트 등)가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단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참고

사업자 선정 지자체 현황

선정기관(지자체)		선정 작물	비고
강원	태백시	배추	고랭지 지역 자동 관수 시스템 구축
충북	제천시	사과	자동관수, IT페르몬트랩활용 예찰
	청주시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전북	부안군	마늘	자동관수, 건조시스템 구축
		삼백초	자동(관수·관비)를 통한 재배관리
전남	신안군	대파	드론활용 생육관찰, 자동 관수·관비
	영광군	대파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곡성군	사과, 블루베리 등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장흥군	블루베리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무안군	양파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제주	제주	감귤	감귤농장 당도지도 데이터 수집

생태·자연도 등 생태정보를 한번에...에코뱅크 운영

- 생물·생태계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관리·서비스 기반 마련 -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정보포털시스템(이하 에코뱅크, ecobank.nie.re.kr)을 구축하고,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 에코뱅크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계정밀조사, 생태·자연도 등 국립생태원에서 조사·연구한 생태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생태계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담아낸 시스템이다.
- 에코뱅크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국립생태원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생산된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의 생태정보들을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 연구자료 및 문헌 등의 생태정보는 생물·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이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에코뱅크를 통한 생태연구 자료의 공유 및 활용으로 생태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 등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전국의 생태·자연도(800도엽)를 열람할 때 검색 기능(지번, 등급 및 등급평가 사유 등)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도엽: 지도 한 장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전국의 생태·자연도는 1/25,000 축척 지도 800도엽으로 작성되어 있음

○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등급(보전 및 복원),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및 이용)으로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련 정보를 늘리기 위해 생물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생태정보 관련 기술 교류로 에코뱅크 기술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 속한 유관 연구기관과 생태정보 교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올해 2월 체결했다.

□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사진자료. 끝.

- 생태정보포털시스템(에코뱅크)이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국내외 생태조사·연구자료를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통합정보지원시스템

- 생태정보란?
생물·생태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연구 등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조사·분석자료와 관련 문헌 및 시청각 자료

- 생태·자연도란?
전 국토의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

- 도엽이란?
지도 한 장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전국의 생태·자연도는 1/25,000 축척 지도 800도엽으로 작성되어 있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 참석 : 국무총리(주재), 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문체부1·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계청장 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 1단계 정규직 전환 부문별 실적(명, %, 잠정전환규모 대비)>

구분	계		기간제		파견·용역	
	잠정전환 규모(~'20)	전환결정 인원(%)	잠정전환 규모(~'20)	전환결정 인원(%)	잠정전환 규모(~'20)	전환결정 인원(%)
계	174,935	176,791 (101.1%)	72,354	70,155 (97.0%)	102,581	106,636 (104.0%)
중앙 부처	21,054	22,506 (106.9%)	9,693	11,335 (116.9%)	11,361	11,171 (98.3%)
자치 단체	25,263	22,972 (90.9%)	18,992	18,276 (96.2%)	6,271	4,696 (74.9%)
공공 기관	96,030	89,384 (93.1%)	26,154	25,507 (97.5%)	69,876	63,877 (91.4%)
지방 공기업	7,527	5,638 (74.9%)	3,576	3,335 (93.3%)	3,951	2,303 (58.3%)
교육 기관	25,061	36,291 (144.8%)	13,939	11,702 (84.0%)	11,122	24,589 (221.1%)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명)>

구분	계		기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계	15,966	3,401	11,385	2,814	4,581	587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14,516	3,231	10,282	2,686	4,234	545
공공기관 자회사	1,138	117	841	90	297	27
지방공기업 자회사	312	53	262	38	50	15

□ 원활한 정규직 전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였고,
-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쏠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시달하겠습니다.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 사 례 : 발전사 경상정비 >

-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18.12~'19.2)
 -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①'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②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19.2.5 발표)

-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 정책과 사업,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합니다!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3월6일(수)~3월20일(수) 공모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한부모 정책과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한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한부모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3월 6일(수)부터 20일(수)까지 공모한다.
-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미혼모/부·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2010년 사업 시행 이래 해마다 6개 내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혼모·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한부모가족의 날(5.10.)' 제정* 기념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18.1.16.개정, '18.7.17.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함
- 공모는 두 개 분야로 ①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 첫번째 분야는 미혼모/부·한부모 가족 당사자 등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두번째 분야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3월 20일 (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를 통해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공모는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 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다.

□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이 공유·확산되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공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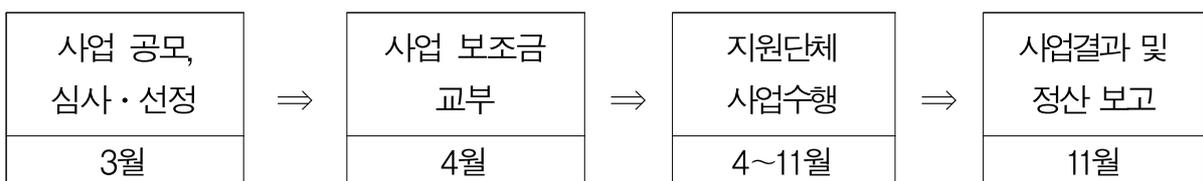
2. '18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현황

붙임 1**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공모 계획**

- 사업명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미혼모/부·한부모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 도모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사업수행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1월
- 공모대상
 - 한부모가족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
 -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예산액 : 54백만원
- 공모분야

분 야	사업 내용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부·한부모·다문화 가족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 공유, 정책·사업 정보 안내 등 상담 제공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도하여 일손 품앗이·자활매장·자조모임 등 자립활동 실시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 활동 전개

- 추진절차



사업수행단체	사업명 및 사업내용	사 진
<p>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마음 더하기(마더) 멘토링 ○ 사업내용 : 한부모 대상 마음보듬이 (멘토) 양성교육, 방문상담 등 실시 	
<p>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 자립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초기 한부모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자조망 구축사업 '나+너×우리=함께' ○ 사업내용 : 한부모 당사자 상담가 양성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 실시 	
<p>두리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미혼 한부모 싱글맘들의 나눔 실현과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 <Their First Steps> ○ 사업내용 : 공동생활가정 입주 한부모 중 리더 선정, 나눔육아,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운영 	
<p>한국한부모연합/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 행사 개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야외행사(서울광장) 진행 	
<p>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모(母)놀로그 ○ 사업내용 : 미혼모 당사자 토크쇼 및 연극 공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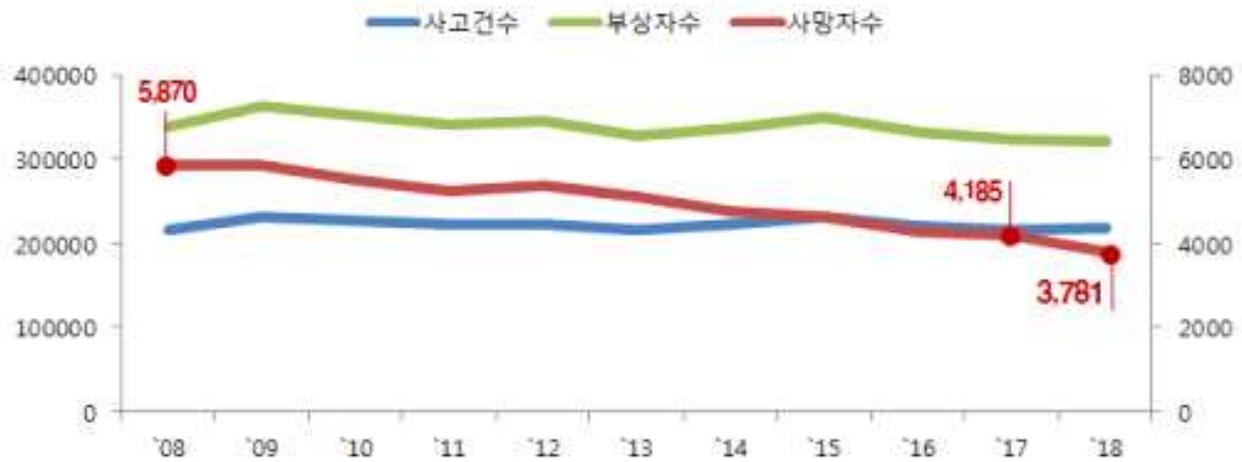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 음주음전,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

- 사망자 수 3,781명, 9.7% 감소 (지난 10년간 총 35.6% 감소)

구분	17년	18년	증감율	일평균
사고 건수	216,335건	217,148건	0.4% ↑	594.9건
사망자 수	4,185명	3,781명	9.7% ↓	10.4명
부상자 수	322,829명	323,036명	0.1% ↑	885.0명

- 음주운전(21.2%), 어린이(37.0%), 보행자(11.2%) 사망자 크게 감소
- 광주(35.9% ↓), 부산(19.7% ↓), 대구(18.4% ↓) 등 큰 폭 감소
울산(17.5% ↑), 인천(10.3% ↑), 대전(4.9% ↑) 등 오히려 증가



□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 '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비교하여 **0.4%(813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하였다.
-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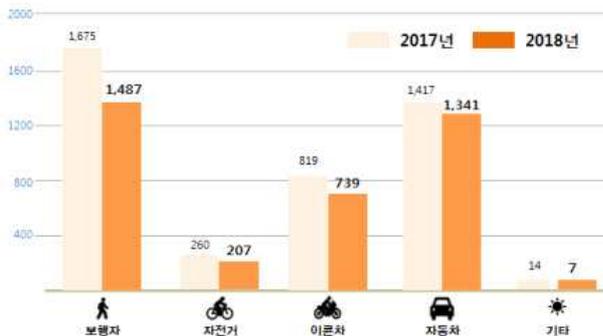
-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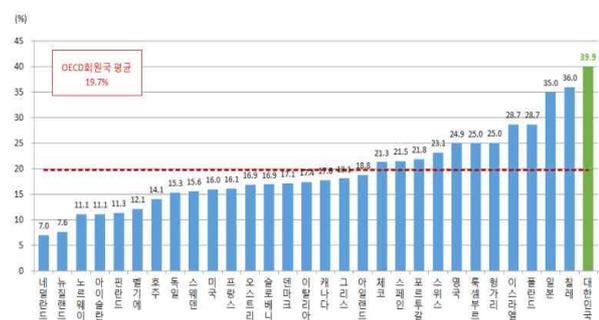
* 보행 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

< 사고시 상태별 비중(2017-2018) >



< 보행 중 사망자 수 구성비(OECD, 2016)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2017-2018) >



-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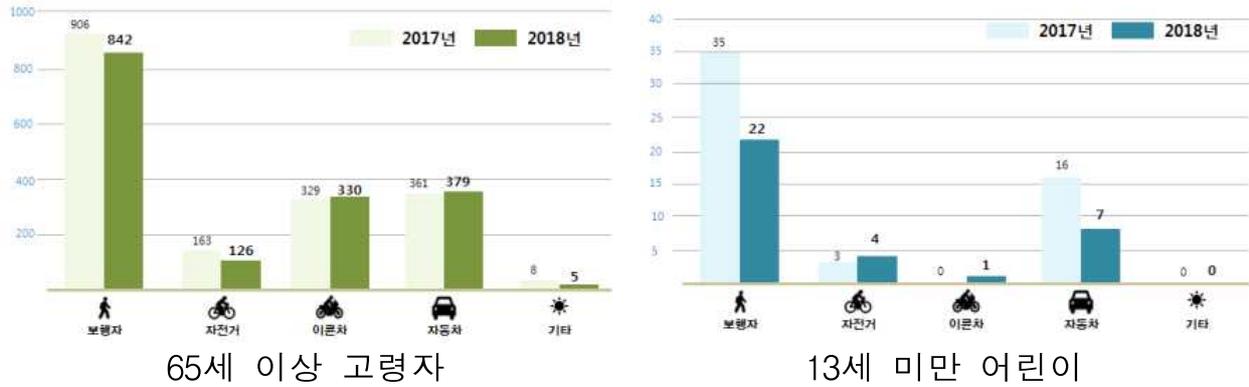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17년: 13.8%(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 / '18년: 14.3%(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하였다.

-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시 상태별 비중(2017-2018) >



-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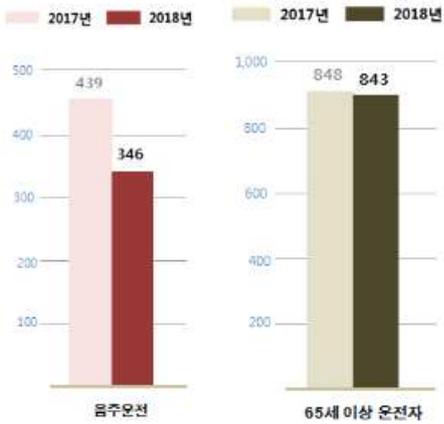
⇒ '17년: 8.8%(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 / '18년: 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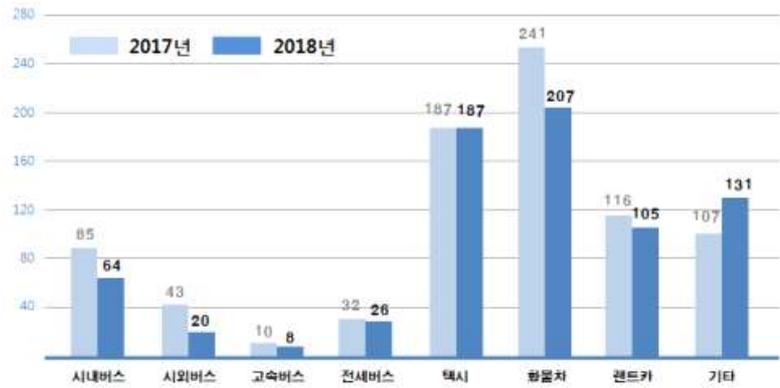
-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 기타 지표별 사망자(2017-2018) >



< 사업용차량 차종별 사망자(2017-2018) >



○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하였다.

-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 관리주체별 도로 사망자 수(2017-2018) >



□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2017년 대비 지방청별 사망자 증감율(2017-2018) >



□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km/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기법, '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18.12.7. 본회의 의결)

-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추진

-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8년 교통사고 통계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018년	217,148	3,781	323,036
2017년	216,335	4,185	322,829
전년대비(%)	813(0.4)	-404(-9.7)	207(0.1)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망(명)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증감률(%)	-2.9	-0.8	-2.5	-4.8	-0.5	-5.7	-5.0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망(명)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증감률(%)	3.1	-5.6	-6.5	-3.0	-7.1	-2.5	-9.7

사고 시 상태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2018년	3,781	1,341	739	207	1,487	7
2017년	4,185	1,417	819	260	1,675	14
대비	-404	-76	-80	-53	-188	-7
(%)	-9.7	-5.4	-9.8	-20.4	-11.2	-50.0

주요 항목별 사망사고

단위(명)

구 분	보행자	노인 (65세 이상)	어린이 (13세 미만)	음주운전	사업용차량
2018년	1,487	1,682	34	346	748
2017년	1,675	1,767	54	439	821
대비(%)	-188(-11.2)	-85(-4.8)	-20(-37.0)	-93(-21.2)	-73(-8.9)

최근 5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단위(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사망(증감율)	4,762(-6.5%)	4,621(-3.0%)	4,292(-7.1%)	4,185(-2.5%)	3,781(-9.7%)
보행사망(증감율)	1,910(-3.6%)	1,795(-6.0%)	1,714(-4.5%)	1,675(-2.3%)	1,487(-11.2%)
보행사망 점유율	40.1%	38.8%	39.9%	40.0%	39.3%

시간대별 보행자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018년	1,487	106	72	146	132	94	73	79	82	119	229	199	156
2017년	1,675	137	101	156	151	107	104	84	99	115	263	192	166
대비	-188	-31	-29	-10	-19	-13	-31	-5	-17	4	-34	7	-10
(%)	-11.2	-22.6	-28.7	-6.4	-12.6	-12.1	-29.8	-6.0	-17.2	3.5	-12.9	3.6	-6.0

최근 5년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844	798	709	562	518
증감률(%)	-0.9	-5.5	-11.2	-20.7	-7.8

최근 5년간 노인(65세 이상) 사망사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1,815	1,814	1,732	1,767	1,682
증감률(%)	-1.0	-0.1	-4.5	2.0	-4.8

사고 시 상태별 노인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2018년	1,682	379	330	126	842	5
2017년	1,767	361	329	163	906	8
대비	-85	18	1	-37	-64	-3
(%)	-4.8	5.0	0.3	-22.7	-7.1	-25.0

최근 5년간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763	815	759	848	843
증감률(%)	3.5	6.8	-6.9	11.7	-0.6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919	909	866	906	842
증감률(%)	-3.4	-1.1	-4.7	4.6	-7.1

최근 5년간 어린이(13세 미만) 사망사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52	65	71	54	34
증감률(%)	-36.6	25.0	9.2	-23.9	-37.0

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2018년	34	7	1	4	22	0
2017년	54	16	0	3	35	0
대비	-20	-9	1	1	-13	0
(%)	-37.0	-56.3	100.0	33.3	-37.1	0.0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사망자	4,762	4,621	4,292	4,185	3,781
음주사망자	592	583	481	439	346
비중(%)	12.4	12.6	11.2	10.5	9.1

음주운전 치사율(전체사고와 비교)

단위(명)

구분	전체 사고			음주 사고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2018년	217,148	3,781	1.7	19,381	346	1.8
2017년	216,335	4,185	1.9	19,517	439	2.2
대비	813	-404	-0.2	-136	-93	-0.4
(%)	0.4	-9.7	-10.5	-0.7	-21.2	-18.2

월별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346	27	36	30	30	29	21	28	35	32	33	20	25
2017년	439	37	24	57	39	37	34	44	29	46	34	28	30
대비	-93	-10	12	-27	-9	-8	-13	-16	6	-14	-1	-8	-5
(%)	-21.2	-27.0	50.0	-47.4	-23.1	-21.6	-38.2	-36.4	20.7	-30.4	-2.9	-28.6	-16.7

시간대별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00~02시	02~04시	04~06시	06~08시	0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2018년	346	47	41	42	26	11	14	11	17	23	28	29	57
2017년	439	66	71	66	24	10	16	11	13	24	37	38	63
대비	-93	-19	-30	-24	2	1	-2	0	4	-1	-9	-9	-6
(%)	-21.2	-28.8	-42.3	-36.4	8.3	10.0	-12.5	0.0	30.8	-4.2	-24.3	-23.7	-9.5

도로 종류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기타
2018년	3,781	252	635	856	1,874	164
2017년	4,185	248	722	982	2,082	151
대비	-404	4	-87	-126	-208	13
(%)	-9.7	1.6	-12.0	-12.8	-10.0	8.6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명)	273	241	273	248	252
증감률(%)	-8.4	-11.7	13.3	-9.2	1.6

노선별 고속도로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경부	서해안	중부	중부내륙	영동	중앙	호남	서울외곽순환	서울양양	남해	익산포항	기타
2018년	252	41	33	24	36	16	16	10	12	5	9	5	45
2017년	248	37	23	10	25	24	13	23	17	2	9	4	61
증감	4	4	10	14	11	-8	3	-13	-5	3	0	1	-16
(%)	1.6	10.8	43.5	140.0	44.0	-33.3	23.1	-56.5	-29.4	150.0	0.0	25.0	-26.2

사업용차량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렌트카	기타
2018년	748	64	20	8	26	187	207	105	131
2017년	821	85	43	10	32	187	241	116	107
대비	-73	-21	-23	-2	-6	0	-34	-11	24
(%)	-8.9	-24.7	-53.5	-20.0	-18.8	0.0	-14.1	-9.5	22.4

지방청별 사망사고

단위(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년	3,781	300	139	111	128	75	85	74	473	186	199	221	375	260	335	418	320	82
2017년	4,185	335	173	136	116	117	81	63	562	214	237	227	374	312	393	436	329	80
증감	-404	-35	-34	-25	12	-42	4	11	-89	-28	-38	-6	1	-52	-58	-18	-9	2
(%)	-9.7	-10.4	-19.7	-18.4	10.3	-35.9	4.9	17.5	-15.8	-13.1	-16.0	-2.6	0.3	-16.7	-14.8	-4.1	-2.7	2.5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마을 운영진이 이끈다

- 해수부·어촌어항공단, 1차 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1차 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어촌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어촌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1차 교육에는 2018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평가에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28개 마을 중, 우수마을의 운영성과를 배우고자 하는 어촌계장, 사무장 등 약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 날에는 올해의 어촌관광 정책방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 발표, 국내외 6차 산업 사례 및 발전방안, 세무회계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특강 후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마을별 운영진들이 어촌관광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시설과 마을 내 6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어촌관광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과장은 “이번 교육이 어촌관광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어촌관광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월에는 동·서·남해 권역별 특성화 교육*이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02-6098-0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동해권) 4. 2.(화)~3.(수), 강원 양양 수산어촌체험마을
- (서해권) 4. 9.(화)~10.(수),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남해권) 4. 16.(화)~17.(수),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1. 추진 개요

- 일시/장소 : 2019.3.7(목) ~ 8(금) / 백미리어촌체험휴양마을(경기도 화성시)
- 주요내용
 - 해수부 정책방향, 우수마을 및 6차산업 사례, 회계실무교육 등

2. 행사 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3/7 (목)	~ 14:00		◦ 등록	
	14:00 ~ 14:10	10분	◦ 인사말씀	
	14:10 ~ 14:20	10분	◦ 2019년 어촌관광 정책방향 설명	해수부 담당자
	14:20 ~ 14:50	30분	◦ (강의 1) 백미리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	이창미 사무장
	14:50 ~ 15:00	10분	◦ Coffee break	
	15:00 ~ 15:50	50분	◦ (강의 2) 국내외 6차산업 사례 및 발전 방안	서윤정 대표
	15:50 ~ 16:00	10분	◦ Coffee break	
	16:00 ~ 16:50	50분	◦ (강의 3) 세무회계 실무교육	홍태익 교수
	16:50 ~ 17:00	10분	◦ Coffee break	
	17:00 ~ 18:00	60분	◦ 어촌관광 활성화 간담회	
18:00 ~	-	◦ 석식 및 휴식		
3/8 (금)	08:00 ~ 09:00	60분	◦ 조식	
	09:00 ~ 11:00	120분	◦ (현장시찰) 어촌체험 현장 및 마을 가공공장	이창미 사무장
	11:00 ~ 11:30	30분	◦ 총평 및 마무리	

* 강사 및 일정은 변경가능

□ **교육개요**

○ 일시/장소

- (동해권) 2019. 4. 2(화) ~ 3(수)/강원 양양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서해권) 2019. 4. 9(화) ~ 10(수)/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 (남해권) 2019. 4. 16(화) ~ 17(수)/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 대상자 : 97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교육을 희망하는 운영진

○ 교육목적 :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성공 사례 전파 및 권역별 특성화 교육,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내용 : 동·서·남해안 권역별 특성화 교육

□ **교육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00		◦ 대상자 접수	
14:00~14:50	50분	◦ (강연 1)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	
14:50~15:00	10분	◦ 휴식	
15:00~15:50	50분	◦ (강연 2) 권역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안	
15:50~16:00	10분	◦ 휴식	
16:00~16:50	50분	◦ (강연 3) 권역별 6차산업 성공사례	
16:50~17:00	10분	◦ 휴식	
17:00~17:50	50분	◦ (강연 4) 어촌관광 활성화 간담회	
18:00~	20분	◦ 친목의 시간	
08:00~09:00	60분	◦ 조식	
09:00~11:00	120분	◦ (현장시찰)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 시찰	
11:00~11:30	30분	◦ 총평 및 마무리	

※ 교육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